



‘고무발포단열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제외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3년(2018.12.31)간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그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가 지정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고무발포단열재가 기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새로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플라스틱포대 등 4개 품목이 빠지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12개 품목 중 8개(커튼, 차양, 볼라드, 잡석, 데이터 포트장치, 디지털영상 정보 안내시스템, 막 구조물, 포설형 탄성 포장재)만 채택돼 총 127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고무발포단열재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매출 신장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자 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적용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매출액 감소, 중소기업간 정부정책의 역차별, 시공상 비효율 등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 축소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정 기관인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토부, 산자부, 행자부, 기재부, 환경부, 조달청, 중기중앙회 등 관계부처와 국회(산자위, 국토위)등에 적극 건의했다. 또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와도 연대하여 각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중소 공사업체의 주된 시공영역인 10억원 미만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임의적용 대상공사에 대한 규정 삭제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시 공사 업역 침해 및 분쟁 야기 품목 제외 등이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공사용자재 지정 반대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I.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하나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을 관급으로 제공하는 제도
- 종합공사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전문공사 3억원) 공사로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로 의무 설계토록 되어 있음
- 2009년부터 시행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2009년 140개, 2010년 120개, 2012년 119개, 2015년 123개임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절차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구성(15인 이내) 및 심의·의결 사항

- 위원장 : 중소기업청 차장
- 위 원 : 국토부, 행자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조달청(당연직),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 심의·의결 사항
 -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지정 제외에 대한 사항
 -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③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II.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기계설비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1. 1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체의 주된 시공영역, 막대한 매출감소 및 생존기반 위협

- 공무원가 중 재료비는 통상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관급자재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중소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경영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용인원 축소, 운영경비 절감, 폐업 등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단위 : %)

구 분	5억 ~ 30억 원 미 만			
	2010	2011	2012	2013
재 료 비	27	29	31	31
노 무 비	10	10	11	11
외 주 비	45	46	44	43
현 장 경 비	18	15	14	15
(기 계 경 비)	(4)	(4)	(5)	(5)
공사원가 합계	100	100	100	100

※2013년 기준 건설공사 완성공사 원가통계(대한건설협회)

2. 시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의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으로 공사현장 분쟁 및 민원 야기

- 공사현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나, 직접구매제로 적기공급이 어려워 효율적 시공이 곤란하며, 자재업체와 공사업체간 하자원인을 둘러싼 분쟁 지속 야기
- 목적물에 적합한 자재 선택 불가, 설계변경 등 상황변동 시 이미 구매된 자재의 무용지물화, 자재 재발주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재납품에 따른 공기지연, 관리비 증가, 지연배상 등 각종 문제 야기로 공사업체 및 발주기관 모두 불만 팽배

※ 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공사현장 부작용 사례

- 적기 공급지연으로 공기지연, 현장관리비 증가 등 비효율 초래
- 관급자재 일시 공급 시 야적장 마련, 창고설치, 관리인력 배치, 자재 파손 및 손실향해 등 관리비용 및 부담 증가
- 하자발생 시 자재업체와 시공사간 하자책임구분 곤란으로 즉시 하자보수 곤란 및 이용자 불편 가중
- 직접구매에 따른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등 행정력 가중
- 자재구매 및 시공상의 권한과 책임 불일치로 지휘·통제 기능 저하
- 품질확보 측면에서 목적물 구축에 적합한 자재 활용 곤란

3. 자재 발주 시 설치포함 발주, 건설업역 침해 및 품질저하 발생

- 자재 발주 시 시설공사(설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재 제조업체에게 물품구매로 발주한 사례가 빈번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역을 침해하여 산업간 분쟁 야기
- 설치부문을 포함해 물품구매로 발주 시, 정상적인 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4대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간접비용이 제외되어 설치비 부족에 따른 품질저하 발생

4.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자재구매 실적 반영 확대, 시공업체의 우수한 사급자재 선택권 제한

- 중소기업청에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일선 발주기관에서 임의적용제도를 확대 해



- 석·적용하거나 감사 지적 등을 우려해 3천만원 미만 자재임에도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사례 빈번히 발생
- 특히, 법령상 임의규정으로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까지 ‘특정업체 봐주기’나 ‘리베이트 제공’ 등 자재업체의 로비에 따른 자재 직접구매 확대로 공사업체의 우수한 사급자재 선택권 제한
 - ※ 미국, 일본 등은 직접구매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자재선택의 자율성 부여

5.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불균형, 산업간 균형성장 저해 및 갈등 초래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일방적으로 중소 제조업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야기로 제조업체와의 갈등이 유발되어 산업간 평화 저해
 - ☞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산업간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배분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제도 및 환경 조성 필요
- 중소 자재업체만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청의 편향된 정책은 중소 공사업체 매출 축소로 정부정책의 불신 초래

Ⅳ. 협회의 고무발포단열재 공사용자재 지정 반대 건의 주요 내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해당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10개사 이상 시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청은 2012년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생산확인 증명업체 5개사만으로 중기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함

- 중기간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워 1개사가 사실상 독과점(90%)하여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중소건설업체 및 동종 업체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와 생산·판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제의를 수차례 건의하여, 중기중앙회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 실태조사 결과 3개사를 취소처분 공고(2014.8.28) 하였으나, 해당업체의 가치분신청으로 행정소송 중임

- 이런 와중에 한국고무공업협동조합은 고무발포단열재를 201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요건으로 갖추기 위해 직접 생산하지도 않는 업체까지 포함시켜 국내에서 직접생산·공급 업체가 10개사라고 허위 제출하고, 수입금액도 과장하여 지정추천 신청함
-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명분을 들어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 확인업체 7개사만으로 중소기업청에 중기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추천 함(2015.10.8)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고무발포단열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반대의견 제출(2015.10.16)

- (지정반대 의견)

△ 지정요건을 5개이상 업체로 완화한 과도한 특혜지정으로 한 업체가 90%를 독과점하여 중소기업간의



역차별 발생

△ 단열재 품목은 500여개의 많은 규격이 있어 자재 및 공정 관리에 어려움 상존

△ 성능 차이가 없는 유사제품 보다 2~3배 공사비가 비싸 정부 예산낭비 초래

V.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사용자재 지정반대 추진 현황

1. 관계기관 건의 현황

일자	건의처	건의내용
2013.11.29	중기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 직접생산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촉구 및 지정 취소 건의 ☞ 중기청, "2014년 6월경 고무발포단열재 등 중기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회신 받음 (2013.12.24)
2014.4.25	국토부	제1차관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축소 및 폐지 건의 ☞ 김경식 차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중기청과 협의하여 개선 노력 답변
2014.5.20	중기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 축소 건의 방문 - 적용대상공사 축소, 분쟁발생 및 규격이 다양한 자재 제외 등 직접구매 예외사유 확대 건의
2014.5.26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현황조사 시 관계 전문가 참여 협조 건의
2014.5.28	국토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 축소 개선 건의
2014.5.30. 6.13	중기청	중기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건의
2014.6.23~7.11	중기청 중기중앙회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실태조사
2014.8.11	중기중앙회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 확인 증명 취소 청문회 개최
2014.8.28	중기중앙회	-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확인취소(3개사) 행정처분 공고 - 디에이치나노텍,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2014.9.17	중기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제외 촉구 건의
2014.12.24	감사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관련 협의
2015.4.8	국토부	국토부장관 조찬간담회에 관급자재 축소 건의
2015.5.19~6.11	국토부, 산자부, 행자부, 기재부, 환경부, 조달청, 중기청, 중기중앙회	고무발포단열재, 밸브, PVC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제외 건의서 제출
2015.5.22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 감사원, 국토부, 산자부, 행자부, 기재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연대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관련 대정부 개선 건의
2015.6.10	청와대, 총리실, 국회(산자위, 국토위), 감사원, 국민권익위, 중기청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연대하여 공동 건의문 제출



일자	건의처	건의내용
2015.7.10, 7.14	중기청, 중기중앙회	2016년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신청 현황 파악
2015.7.17	건단련	관급자재 개선관련 건단련 운영위원회 참석
2015.7.21	건단련	건설단체총연합회 관급자재 축소건의 T/F회의
2015.7.28	중기중앙회	고무발포단열재 지정 추천 신청서류 협조요청
2015.8.5, 8.7	중기중앙회	2016년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추천 예고에 대한 고무발포단열재, PVC관 및 밸브 지정 반대이건 제출
2015. 8.6	중기중앙회	지정 추천 공청회, 반대이건 개선
2015.8.19	중기중앙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관련 조정회의 참석(밸브)
2015.8.21	중기중앙회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시 업계전문가 입회 건의
2015.8.26	중기중앙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관련 조정회의 참석(고무발포단열재·PVC관)
2015.9.1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토부, 산자부, 행자부, 기재부, 조달청, 중기청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관급자재 지정반대 공동 건의문 제출
2015.9.4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관급자재 지정 제외 건의
2015.9.17	중기중앙회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참여 전문가 추천
2015.9.18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면담
2015.10.1	중기중앙회	관급자재 지정추천 예고에 대한 추가의견 제출
2015.10.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과과장 면담
2015.10.6	새누리당 오영식 의원	고무발포단열재 제외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공
2015.10.13	건단련	건설단체총연합회 관급자재 축소건의 T/F회의
2015.10.16	국토부, 산자부, 행자부, 기재부, 환경부, 조달청, 중기청	공사용자재 지정반대 건의
2015.10.21~26	국토부, 산자부, 행자부, 기재부, 조달청, 중기청	공사용자재 지정반대 설명 및 지원요청
2015.11.12	국토부, 중기청	공사용자재 지정반대 설명 및 지원요청
2015.11.16	중소기업청장	조기호 편집위원장, '고무발포단열재' 공사용자재 지정 반대 건의
2015.11.18	행자부	공사용자재 지정반대 관련 방문·건의
2015.11.23	중기청	공사용자재 지정반대 관련 방문·건의
2015.11.23	국토부	고무발포단열재 지정반대에 대한 고무공업협동조합의 반론 제기에 따른 의견 제출
2015.11.26	기재부	공사용자재 지정반대 관련 방문·건의



2. 언론 홍보 및 기고 현황

- 한국건설신문 창간 좌담회, 관급자재의 문제점 토론('14. 6. 26)
- 건설경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폐해 게재('14. 7. 10)
- 건설경제, '관급자재제도 개선해야' 시론 기고 ('14. 7. 14)
- 국토일보, 관급자재제도 개선 시급 게재 ('14. 7. 21)
- 건설경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역차별 게재('15. 10. 2)



3. 추진 결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윤원위원회 개최(2015.11.30)
 - 고무발포단열재는 지정 반대·유지 의견이 참여하여 개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로 의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에서 '고무발포단열재' 지정 제외 의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공고(중기청 공고 제2015-387호, 2015.12.30)
 - 지정기간 : 2016.1.1.~2018.12.31
 - 지정 품목 : 123개(현행)→127개(개정)
 - 기존 품목 중 지정 제외 품목 : 4개(고무발포단열재, 공기살균기, 애자, 플라스틱자루)
 - 신규 지정품목 : 8개(볼라드, 차양, 막구조물, 커튼, 잡석, 데이터 포트장치, 디지털영상 정보 안내시스템, 포설형 탄성 포장재))
- ※ 기존 품목 중 고무발포단열재가 유일하게 지정에서 제외 되었고, 기계설비부문 신규지정 품목은 없음

VI. 기대효과

- 고무발포단열재 200억 원(2014년도 관급금액) 정도의 회원사 매출 증대
- 효율적인 공정관리, 자재보관 및 관리비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 ○